

자산 인출시 투자용 보다 예·적금 우선... 연금 해지 최후수단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은퇴 이후 자산전략 <끝>

'100세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노년기의 자산 전략도 중요해졌다. 은퇴 이후 30년에 달하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규모는 평균 6억원이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3억15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수준이다. 그러나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는 자산의 81.3%가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편중됐고,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은 1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인 1억3000만원보다 낮다.

◆ '월 소득' 재점검... '인출전략' 중요

'자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월 소득을 점검해야 한다. 자신과 배우자가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월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 지급액 및 배당주에 금 등 수익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교해 부족분을 확인해야 한다.

자산을 인출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예·적금 등 일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먼저 인출하고, 그 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비롯한 투자용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좋다. 연간 1500만원이 넘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와 유의사항>

	배우자	자녀	손주
증여	10년에 5억원	미성년자 10년 2000만원, 성인 10년 5000만원	
결혼		혼인신고 시 2년 이내 1억원(제한 가능)	
출산		자녀 출산 시 2년 이내 1억원(자녀 1인당)	
비고		부부가 자녀·손주 증여 시 합산해서 계산(이혼 시 각각 증여 가능)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는 10년 이내, 손주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
-10년 이상 기간을 두고 10년마다 증여해야 상속세 최소화

5060세대 국민연금 수익비 2~3배 보험료 납입 통해 연금소득 극대화 고위험자산-중위험·안전자산 재편 상속세 아끼려면 '생전증여'도 방법

는 금융소득에는 금융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을 먼저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의 해지는 최대한 미뤄야 한다.

50대·60대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비(년 단과비교해 받는 금액·25년 기준)가 2~3배에 달하는 만큼, 보험료 납입을 통해 매달 받는 연금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보험 비용을 줄이는 '보험 다 이터트'도 중요하다. 의료보험은 실손이나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중심으로 남기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

약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 '자산증식'보다 '가치보전'

자산의 위험도를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한 '자산증식'보다는 기존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자산 소모도 최소화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사라지고 연금소득이나 금융자산 소득으로 주 수입원이 이동하는 만큼, 질병이나 재해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은퇴 이전에 고위험자산 위주로 자산을 편성했다면 중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 주식이나 펀드는 주가 상승에 집중한 '성장형'보다는 가격 변동이 안정적이고 배당률이 높은 '배당형'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좋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원금을 보장하는 은행 예·적금이나 국채 등에도 자산 일부를 분배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나 은행권의 역(逆)모기 지형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존 기간이 길어지거나 주택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연금 지급액이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넘기게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 잘 물려주려면... '생전 증여' 활용

자녀 세대에게 더 많은 자산을 남겨주기 위한 상속 전략도 중요하다. 특히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 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세가 발생하는 만큼, 생전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각종 제도를 활용해 시로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2026년 기준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상속세는 누진 형태로 적용되고, 자녀나 배우자에 공제를 제공해 자산 10억원 구간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다.

반면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도 빠르게 늘어간다. 상속 규모가 20억원이라면 배우자가 생존해도 약 2억33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며, 50억원이라면 14억94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말 서울 아

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속세는 중산층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생전에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자산 이전'이 중요한 이유다.

자산 이전의 핵심은 '증여'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이 지정된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단, 가족 간의 공제 한도 내 증여 시에도 수증자(받는 사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손주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세대생략증여'도 가능하다. 미성년 손주에는 10년 합산 2000만원, 성인 손주에는 10년 합산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공제된다. 단,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미 자녀세대가 손주세대에게 증여한 뒤라면 중복 공제는 불가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노후가 길어진 만큼,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가치 보전을 위한 자산 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나이가 자녀나 손주 세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절세·상속 전략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매물 실종에 월세 전환... '전세대란' 온다

수도권 전세가 올들어 2.06% 상승 전세수급지수 5년여 만에 최고치 3월 전월세 거래량의 69% '월세'



지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스시스

전세가격이 들쭉이는 것은 물론 물량 자체가 부족하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도 빠르게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초 이후 4월까지 전국이 올해 들어 1.47%나 올랐다. 전년 동기(0.02%)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 전세가 2.06% 올랐다. 상승률은 서울 2.39%, 경기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0.41%, 0.1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세가격은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다 올랐다. 같은 기간 작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5대 광역시의 상승률도 1.16%

에 달한다.

임대물량 부족 우려로 전세수급지수는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주 113.7으로 지난 2021년 3월 둘째주(11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웃돌 경우 공급 부족을 뜻한다.

KB부동산은 "절대적인 공급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전세수급지수는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2021년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이제 임대차 거래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압도적이다.

3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8만건으로 전월 대비 10% 늘었다. 이 가운데 월세가 19만3000건으로 68.9%에 달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월세 거래의 비중이 68.6%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최근 5년간 평균치인 52.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세사가 여파로 월세를 선호했던 빌라 등 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월세 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월세 거래의 비중이 3개월 연속 50%를 웃돌았다. 최근 5년간 평균은 41.1%다.

월세가격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서울 1.1%, 경기 0.9%, 인천 0.4%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당국, 보험대출 조인다... 계약해지 우려

보험사 10곳, 대출잔액 55조 달해 한도 축소시 급전창구 위축될 수도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계약대출 이미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소비자 보호와 자금 유통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빚투(빚내서 투자)와 계약 해지 위험을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란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보험을 깨기 전 활용하던 완충장치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 5곳과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5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55조49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54조6688억원, 2월 54조8355억원에서 3월 들어 55조원을 넘어섰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별도 심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생활비나 의료비 등 단기 유동성 수요에 활용돼 왔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기 전 선택할 수 있는 계약 유지 수단인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 증가세를 주시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계약대출이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금융사 부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이 누적될수록 보장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국의 리스크 관리 주문 이후 주요 보험사들은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최대 한도를 낮췄다. 삼성생명은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최대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고, 현대해상도 연금·저축성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같은 수준의 한도 조정에 나섰다. KB손보는 상품에 따라 한도를 10~20%포인트(p) 낮췄고 DB손보와 한화손보 등도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

문제는 보험계약대출이 빚투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여력이 부족하거나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한도가 줄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부 가입자는 대출 대신 중도해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가 주목받고 있다. 해약은 기존 보장 상실과 재가입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능해 왔다. 증시 랠리와 생활자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보험계약을 깨는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낮아지면 소비자의 선택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KB국민카드, 해외법인 당기순익 급증

1분기 94.4억, 전년비 107억 늘어

KB국민카드 해외법인이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 전쟁과 무역분쟁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가면서다. 해외 법인별 자산 리밸런싱과 조직·프로세스 효율화 등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지난 1분기 해외법인 당기순익은 94억4000만원을 나타냈다. 마

이너스(-)12억6700만원이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년 새 107억원가량 늘었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 법인 KB대한특수은행이 순이익 16억6700만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15억9200만원) 대비 약 32억5900만원 순이익이 개선되며 흑자 전환했다.

태국 법인인 케이비제이(KBJ)캐피탈은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113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71억3200만원) 대비 약 58.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법

인인 KB파이낸시아멀티파이낸스는 -35억5400만원 적자를 냈지만 지난해(-68억700만원)에 비해 적자 폭을 절반가량 줄였다.

캄보디아 법인의 경우 현지 자동차 금융 시장 개선세가 실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대한특수은행은 글로벌 환경 악화로 인한 무역·관광 등 대외 충격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됐으며,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비우호적 영업 환경이 지속 중이다. 다만, 비우호적 환경에도 KB대한특수은행의 주요 상품과 연관된 자동차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현 기자 wotjs4187@